

社說

“늦어지는 학사일정, 위협받는 학풍”

— 합리적인 학사운영을 촉구하며 —

금번학기 학사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그 폐해의 조짐들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등록금 책정협상 역시 큰 진통을 겪고 있어 향후 학사일정의 정상적인 운용에도 악영향을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타대학과 비교할때 본교의 학사일정은 그리 일찍 시작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상당수의 대학이 정상적인 강의를 도입하고 있다.

개강을 맞은지 일주일 이상 되었지만 아쉽게도 정상적인 강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수강신청이후의 정정기간까지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실질적인’ 개강은 3월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령 타대학 학생들이 본격적인 강의를 받을때 본교 학생들은 첫 강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성급한 가정도 나올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행 학사일정은 학교당국이 본교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좀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때 ‘학사일정’이 늦다는 사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일러두고자 한다. ‘늦다’라는 기준은 개강에 따른 정상적인 강의를 기본이라고 보는 시각에 토대를 둔다.

학사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중간시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대로라면 예전과 같이 시험전까지의 수강기간은 불과 2~3주 안팎이다. 따라서 교양과목의 대부분은 리트로서 시험을 대체하거나 만약 치른다고 해도 기말고사에 중점을 두게 되어 결국 두시험이 같은 비율로 반영되지 않는 모순을 초래한다.

또한 현행 학사일정에 준한다면 학업과 학생자치행사의 발전적인 조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일정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지금이라도 큰 의의를 갖는 집회나 대중제 등의 자치활동이 수업결손의 큰 요인이 되는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한학기의 수업기간은 총 16주이나 중간·기말 시험을 전후한 4주를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12주이며 공휴일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강의와 자치행사는 비적대적인 관계이면서도 시간을 가운뎃 놓고 마찰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제도 심각하거나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학풍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3월초까지 방학기간인 본교의 실정을 감안할때 다음과 같은 틀을 설정해 볼수 있다. 예를들어 방학전에 수강신청을 마친후 방학중에 예비강의를 실시하고 수강신청의 정정 역시 동(同)기간내에 마치는 것을 골격으로 삼자는 것이다.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막는 동시에 학업분위기의 조기조성이라는 대학의 근원적인 생명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중 포석이 되는 셈이다. 만약 학원의 풍토가 학사일정의 운용여하에 따라 상당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다면, 그 귀결로서 모든 경회인은 우리대학의 실정과 특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볼만 할 것이다.

충심으로 재언하건대 ‘뿌리깊고 튼튼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현행 학사일정이 안고있는 모순점을 경회인 모두의 지혜로서 풀어나갈 것을 당부한다.

민중운동 역량 강화 계기로 삼아야

— 지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

30년만에 부활된 지자체는 ‘불뿌리민주주의’라는 본래의 뜻이 상실된 채 향후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차기 대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현 정국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흔히 ‘정치는 경제 이해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경제구조의 변화가 정치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자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경제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를 둘러싼 경제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독점자본의 고부가치 창출에 의한 첨단산업으로의 이진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강화와 ‘UR협상’을 기점으로 수입개방의 압력이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동향에 따라 정권과 자본은 국제분업체제로의 안정적 재편과 ‘92년 전면수입개방후,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자본축적 메카니즘’으로의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결국 경제중심의 심화와 독점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며, 그에 따라 민중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설혹 선진국 대열에 건다 할 지라도 우리사회의 민중과 지

배권력과의 대립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될 양상이다.

일촉즉발의 민중과 지배권력의 대립적인 상황에서 민자당을 지자체를 통해 민중들의 변혁열기를 체제내화하려 할 것이고, 지역유지들이 지자체에서 대거 당선토록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모든 기득권세력을 영입한 후 보다 안정적인 지배체제, 즉 내각제개헌을 현실화 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작년의 정세 속에서 민중들의 분노를 개량화 시켜 ‘반민자당’전선을 계속적으로 약화시켰던 평민당은 이번 지자체 선거결과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로 나아갈 것인지 보수대연합을 통해 내각제개헌에 참여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이다.

지배권력과 보수야당의 이러한 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중운동세력은 지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개적인 합법정치 공간에서 수세에 있는 민중운동세력은 지자체국면을 운동의 전제로 규정하기 보다 점진적인 운동공간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운동역량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개적인 합법정치공간에 각계각층의 참여로 인해 ‘반민자당’ 전선이 강화될 것을 예측하고 민중운동세력은 선거국면을 적극 활용해 앞으로의 정세에서 중점사안으로 떠오를 ‘수서비리’, 물가문제, 임부 관련 대중집회를 통하여 전국민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국고용구조와 ‘해외인력수입방안’

생계의 터전 잃어가는 노동자

사론

I. 인력수급대책

인력수급 및 고용문제가 주요한 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거의 모든 제조업종에서 생산적 기능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신발이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업종의 중소기업에서 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이나 해운업, 운수업 등의 핵심적인 사회기반 서비스업종도 점차 기능인력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한편 전자 기계 등 고도 기술산업에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급기술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연구원)의 추산으로는 95년까지 약 26만여명의 고급기술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기능인력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사실 작년부턴 시작된 정부의 유종업소 심양영업금지조치도 실제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강제적인 노동력유동화정책의 성격이 농후하다. 또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단일호봉제의 도입과 기능인력의 처우개선 및 각종 혜택 부여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능장려대책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고 일각에서는 그것이 한국경제의 성장기반마저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자, 정부는 노동인력수급과 관련 두 가지의 대책을 내놓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는 국방부의 ‘국가사업기능인력 지원방안’이고 또 하나는 노동부가 검토 중인 ‘해외인력수입방안’이다.

II. 외국인 불법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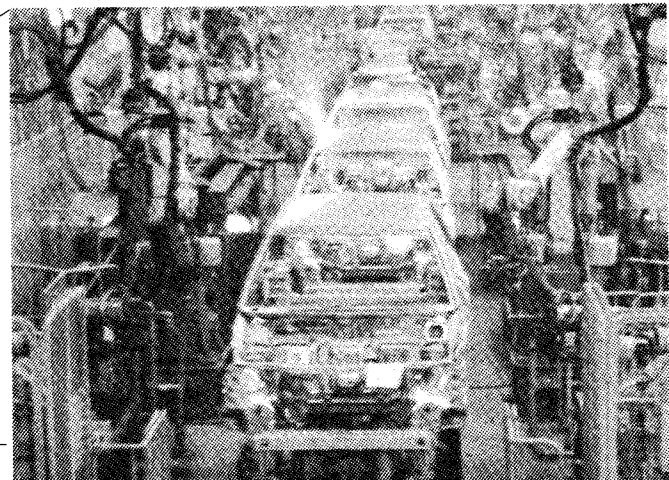
전자는 남아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현역 또는 방위소집부문을 하는 대신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게 한뒤,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일반기업에 기능공으로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 방안은 그 자체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병역의무를 약용하여 민간기업의 노동력부족을 반감제적인 노동으로 충원하려는 비인도적 발상에

서 나온 것으로서 현정권의 고용인력정책의 빈곤만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바야흐로 국방부까지 나서서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기능인력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현정부의 노동정책은 늪에 빠져 있는 셈이다.

그 원인을 “힘든 일을 기피하고 손쉽게 돈을 벌려는 세태 그리고 학력과 소비품조”등으로 돌림으로써 마치 노동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보다 나은 보수, 보다 많은 여가, 보다 쾌적한

이 저하 내지 정체되고, 고용의 불안정이 심화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에 반해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손쉽게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반노동자적 자세는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제조업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고용보험제’ 수급불균형 개선책 인력 확충위해 노동환경 개선돼야

두번째의 정부대책은 노동부가 검토 중인 ‘해외인력 수입방안’이다. 노동부는 현재 탄광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동포와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 등 해외인력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업계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고수해온 해외인력 수입 금지 방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을 끈다. 물론 현재까지는 탄광업계에 한정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여타 업계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소기업에서 불법으로 외국인용 고용해서 일을 시켜오다가 적발된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III. 정부의 무책임한 고용인력 대책안

최근 정부의 이러한 고용인력 대책들은 무엇보다 정부당국이 현재의 고용인력정책의 본질과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당국이나 자본가 진영은 현재의 고용인력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근로조건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중소기업 기능인력부족의 일차적 원인은 이들 업체의 저임금, 장시간노동,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 우리 나라 경제의 불건전한 구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고용인력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증권이나 부동산투기, 호화사치품 수입판매, 폐쇄적 유종업 등을 통한 비정상적 이윤추구에 골몰하고 있는 일부독점대자본과 투기자본의 발호에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를 제어하기는 커녕 방치 방조한 현정권 역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며서도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나나게 되어 있는 구조적 고용불균형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대비한 고용인력수급정책을 제대로 수립 시행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정책 빈곤 역시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의 문제점은 이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안정을 외면한 채, 거의 전적으로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값싼 해외노동력이 대거 국내에 유입될 경우 해당 부문의 국내노동자의 임금

적 과제를 하겠다. 물론 이는 정부당국의 노동정책에 대한 시각의 대전환 다시말해 노동정책이 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전제하는 것이다.

장항근
(서울대 박사과정·사회학)



겨우 작은 앞새를 띄울 만한 실여울이 흘러 흘러

마침내 양자강만한 대하(大河)를 이룬다는 뜻의 ‘남상(濤船)’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큰강의 깊은 거대한 물줄기를 떠올려 봅시다. 지금 우리의 학문과 인품의 깊이가 비록 얕고 좁더라도 1년 뒤를 기약하는 결심으로 씩씩이 한줄기 지식이라도 마음에 모아야 합니다.

출발은 누구나 작은 뱃.
1년뒤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위하여 남상(濤船)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중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